

## 해방 6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출처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저자 :
- 발행일 : 2005년 8월 2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과거사국면에서 8.15 60주년을 맞는 단상

임 대 식  
역사비평 주간

## 글을 시작하며

근래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과 과거사법이 통과되었고, 이미 국정원, 군,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도 진행되고 있다. '이상호 X파일'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철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역사적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 역사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힘, 역사의 힘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동북공정과 일본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이 타국과의 역사 전쟁이라면 이것은 역사 내전에 해당한다. 특히 박근혜의 정치적 위상이 커질수록 친일-독재와 개발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띤 박정희에 대한 평가 논란은 더해질 것이다. 과거사 내전은 전세가 일정하게 판가름 나게 될 수년 동안 열전의 형식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년간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또 역사전쟁의 판세를 가르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 8.15는 광복 60주년이라 하여 유별나게 기억되고 있다. 8.15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또 객관적으로 보자면 종전일이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남한은 광복, 북한은 해방, 일본은 패전, 연합국들은 승전으로 각각 기억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극우들은 1948년의 8.15를 건국절이라 부르며 광복절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8.15에 대한 인식은 물론 8.15 60주년을 맞는 감회도 처한 입장과 한국근현대사와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글은 한 역사학자가 과거사전쟁 국면과 8.15 60주년을 맞아 역사와 현실을 거침없이 넘나들며 작성한 거친 단상임을 감안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 1. 노무현 대통령의 딜레마

최근 노대통령이 (대)연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논란의 와중에 '이상호 X파일'이 돌출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그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진실규명과 화해·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두 가지 화두를 살필 수 있다. 노대통령은 세 가지 분열 요인을 거론하면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의 국민통합 시대를 주장했다. 경축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분열요인	핵심 내용	대안
역사적	친일과 반일, 좌우익,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계류중) 4) 공권력에 의한 인권과 민주질서 범죄의 경우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특별법 마련
정치적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경제 사회적	양극화	정부대책, 기업, 대기업노조의 기득권 포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현실적 기득권 포기가 결코 쉽지 않고 더구나 역사와 현실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식민과 독재의 과거사 정리가 현실적으로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입지와 곧바로 연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누더기법으로 통과되었던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심각한 딜레마가 있다. 분열과 대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의미있고 또 실현가능하다면 과거를 좀 덮어두는 것도 국가최고 지도자로서 결단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 과거사정리와 화해는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격인데, 전자의 경우 잘하면 두 마리 중 일부는 잡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두 마리 다 놓칠 가능성이 크다. 누더기 과거사법과 메아리없는 대연정론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터이지만 선택해야 한다. 대연정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확실한 한 마리 토끼 즉 과거사 정리를 택해야 한다. 대연정론은 실제로 화해와 통합의 낮은 단계의 것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 2. 화해·통합=대연정론=남한판 햇볕정책

연정론은 남한판 햇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해와 타협, 비적대적 경쟁과 공존이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상대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면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는 지경에서 궁여지책으로, 또 운명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선물도 준다. 조선노동당이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경상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노동당과 공존하는데 한나라당과 공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정치적 실체는 한나라당이지만 물론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지역과 계층을 포괄한다. 또한 민주당이나 충청도당도 그 대상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노대통령의 지지자들도 햇볕정책의 걸림돌이며 교화 대상이다. 김정일을 대북 햇볕정책으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갑제나 김용갑을 설득하는 것도 지난하다. 마찬가지로 박근혜나 한화갑을 대연정=남한판 햇볕정책으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하라'거나 '노무현을 찍은 내 손가락을 찌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다. 그들의 정서이고 소신이며 밥그릇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북 햇볕정책이 점차 설득력을 가졌듯이 연정론도 원론의 차원에서 보자면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화될 것이다. 아니 그러기를 정말 바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정을 거론하는 것에 나는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듯이 노대통령에 대한 반대자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둠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햇볕이 최종적으로는 독약이고 자살행위임을 알지만 궁여지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정론이 한나라당 흔들기나 분열책동이라는 지적은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이다. 연정은 지역맹주와 부당한 기득권자로서의 지위를 점차 포기하게 한다. 하지만 남한판 햇볕정책은 한나라당이 불임정당이라는 자의식이 압도하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조중동이 건재하고 구주류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한 그러하다. 게다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현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햇볕정책에는 기본 전제가 있다. 주체의 관점이다. 서로 수렴되고 가까워지지만 햇볕을 비추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자기중심이 있고 주체가 서야 햇볕정책은 존립할 수 있다. 연정론은 위기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라고 청와대 모 인사가 말했다고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연정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상대자가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동거(同居)나 연정(戀情)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판판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노대통령이 대연정을 제기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대연정론이 현실성이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거듭 말하지만 비주류가 주류에게 햇볕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 여전히 대통령과 참여정권은 주류가 아니다. 몇 차례의 대선과 지난 총선을 통해 주류지배력에 균열이 가해진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주류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박정희를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고, 경제발전을 제일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중심과 주체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대연정은 보수화와 투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노대통령은 스스로 자임한대로 새시대의 만이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내로써 청소부 역할이 그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자신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기득권을 버렸고, 마지막 남은 과제적인 분열과 대결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극복, 양극화해소를 통한 상생과 통합을 위해 기득권 버리기를 고창하지만 귀기울이는 자 거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 그의 연정론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웅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된 측면이나, 정치적 복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진정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하지만 그의 대연정론은 현실을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3. 균형자론=신냉전질서 하의 활로 찾기

당장 3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6자회담은 휴회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는 미 제국의 일방적 패권과 요동치는 동북아질서를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을 불허한다. 부시 집권과 9·11테러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보수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네오콘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본의 보수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경제 문화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발 역사왜곡과 영토도발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갈등은 한일 갈등을 거쳐 중일 갈등으로 확대 심화되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 인권문제, 대만독립문제, 소수민족문제, 일본 재무장(핵무장) 등과 같은 한국과 중국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 감독, 미국 주연, 일본 조연의 신냉전 질서가 강요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론',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동시에 대일 신독트린을 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구상들은 신냉전질서가 한반도의 평화와

1) 광복 60주년을 맞아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발진이 58.9%였다(정치개혁 11.7%, 남북관계개선 6.8%).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는 박정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론과 대일강경기조를 동시에 천명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재론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일강경기조의 천명은 의외의 전개였다. 균형자론의 문제의식은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함께 이전부터 언급된 것이지만 최근 균형자론으로 정리되어 천명되었다. 동시에 천명된 대일강경기조와 균형자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균형자론의 핵심은 미-일-한 위계의 신냉전적 동맹체제에서 벗어나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고투의 산물이다. 북한=주적이라는 냉전시대의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난 것이나 '작계 5029'<sup>2)</sup>에 대한 뒤늦은 재검토도 같은 차원의 발상일 것이다. 냉전시대의 진영체제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 원하지 않은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상황만은 피해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신냉전질서를 강요하고 있고 국내의 수구냉전세력과 친미파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냉전질서와 패권질서하에서 강요된 질서를 거부하려면 보복과 야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이를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강조하는 일견 모순된 양상은 미국과 일본 및 국내 친미파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균형자론의 실재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균형자론은 반미나 한미동맹의 파기라기보다 신냉전질서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라크 파병을 감행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의 신냉전 구도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려 버티는 형국이다. 균형자론의 핵심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 구상이라기보다 냉전시대의 편가르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는 수세적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약한고리 찾기 = 대일강경기조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균형자론의 수세적 구상에 승산이 있는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란 약한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독일보다 더 자주 반성문을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일은 명분이 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광범한 반일정서가 있다. 만약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거부했다면 미국의 보복을 증폭시키는 국내 수구세력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정권 유지마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균형자론이 제출되자 미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식자들까지 참여정부는 누구 편인지 밝히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자론과 동시에 천명된 반일강경기조에 대해서는 내심 못마땅하다 해도 미국도 국

2) '작계5029'는 북한에서의 우발·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개념제회이다.

내 수구세력도 만지 걸기 어렵다. 미국이 비판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반일이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강력하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 지점에서 균형자론과 일견 모순되는 대일강경기조를 느닷없이 천명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일강경기조 천명은 국내용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대일강경기조는 그 표면적 과녁이 일본이기는 하나, 숨겨진 과녁은 바로 일본의 패권주의와 군국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에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약한 고리인 일본을 활용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한일회담 당시와 비교하며 부연해 보자.

1965년 타결된 한일국교정상화는 쿠데타 정권과 일본,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쿠데타 정권은 결여된 정당성을 절대 빈곤의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국내자본과 기술은 보잘것없었으므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 청구권자금이 필요했다. 일본은 자본투자처와 시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주 파트너로 한 미일한 반공동맹의 구축이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도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은 한일회담에 압력을 가했다.

한일회담 당시에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그 박후의 주역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한일회담과 동시에 진행된 베트남 파병 반대 목소리도 의외로 적었다. 박정희는 미국과의 교섭력을 높여 피의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차지철을 앞세워 베트남 파병 반대공작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는 반미가 빨갱이로 직결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화같은 역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1960년대 초반에 냉전적 미일한동맹을 추진했던 미국이 21세기에 신냉전적 동맹을 추진하는 형세이다. 냉전시대에는 반공을 위한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이란 말인가. 반공 삼자동맹에서 미국의 주 파트너는 일본이었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대일정책에 종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다. 또 차지철 같은 최측근을 내세워 반미를 연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대는 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은 부시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시 정부도 한국과 중국에서의 반일기운의 고조를 부담스러워한다. 예전에는 반일감정을 적극 조장했을 보수언론이나 인사들도 일본보다 북한이 나쁘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할 뿐이다.

한국에서의 반일기운은 남북공조는 물론 중국과 동아시아 피해국들의 반일연대를 강화시키는 한편 미일 극우연대의 고립으로 귀결된다. 1919년 한반도에서의 3·1운동이 중국에서 5·4운동으로 나아갔듯이 최근 한국에서의 반일기운은 중국에서 천안문시위 이래 최대의 반일시위와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폭발했다. 일본 극우들의 일련의 도발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역이용하려는 의도하에 기획된 것이지만 한편 미일극우연대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국면에서 반일은 분명 약한고리이다. 가해자로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명분을 더하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고려할 수도 있다. 베트남 전쟁은, 비록 용병의 형태였지만 한국이 가해자로 역할 했던 드문 경우이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사과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동반한다. 물론 베트남전쟁에서의 희생이 헛된 개죽음으로 전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 부담도 존재한다.

## 5. 새롭지 않은 새 음모 = 뉴라이트

독도문제와 교과서문제를 차별 대응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국경을 넘어 시민연대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천과 관련하여 집중해야 할 문제는 내부문제이다. 미일을 중심한 보수-패권연대에 보조를 맞춘 새로운 음모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뉴라이트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민족주의 일변도의 절름발이 민족주의였다. 실제 역사에서 친일파와 친미파는 동일한 존재였지만 친일(파)과 친미(파)에 대한 인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모순되고 절충적인 인식이었지만 일제 식민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친일을 적극 평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절충적인 인식을 극복 하려는 시도가 양측에서 시점을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친일은 물론 친미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한편 최근 친미는 물론 친일까지 적극 해석하려는 흐름도 부상하고 있다. 후자의 흐름은 '식민지 = 근대화' '일제식민지배 = 축복', '친미반공독재 = 건국과 부국' 등의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인 인사들은 친미와 반공은 적극적으로 평가했지만 식민과 독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보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현대사의 식민과 독재까지도 적극 해석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류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식민과 독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해서인지 과감한 주장들을 펼친다.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보수의 혁신 = '우파의 혁신을 통한 좌파의 극복'을 외치며 등장한 새로운 보수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를 자칭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네오콘, 일본의 극우 등과 보조를 같이하는 신보수주의 흐름의 한국적 산물이다. 이들이 내거는 반부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북한인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은 모두 미국적 가치이다. 물론 한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에는 한국적 상황도 관련되어 있다. 두 차례 대선에서 패배하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노당이 제3당으로 진출하자 보수세력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는 과거와 이미지가 나쁘므로 '올드라이트'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않고는 집권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대결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뉴라이트운동권 인사 중 드물게 현실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신지호는 다음 대선이 “뉴라이트와 올드레프트의 싸움”이 될 것이라 했다. 또 뉴라이트 기수들 대부분은 노무현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이라 규정한다. 노무현 정권이 과연 좌파정권이며, 우리당의 유력한 후보 중 누가 올드레프트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제는 좌우의 이념으로 상대를 규정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을 보수라 하지 않고 우익(파)이라고 했을까. 왜 그것도 영어로 표현했을까. 조갑제는 일찍부터 보수 대 진보 대신 우파 대 좌파의 용어 사용과 대립구도를 주장했다. 보수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라이트도 조갑제와 유사한 생각하에 미국처럼 ‘네오콘’이라거나 ‘뉴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뉴라이트라고 자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태어 영어로 표현한 것은 신선하고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일까, 친미와 세계화 등 자기 성향을 반영한 것일까.

뉴라이트로 지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다음과 같다. 자유시민연대, 뉴라이트네트워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뉴라이트싱크넷,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 하이엑스소사이어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지식인그룹, 기독교사회책임, 희망포럼, 헌법포럼 등이다. 또한 뉴라이트와 데일리안 등의 인터넷 매체들이 있다. 장차 뉴라이트 단체는 우후죽순처럼 속출할 것이고 또 연대도 강화될 것이고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단체는 다양하지만 의외로 핵심인물은 중첩된다. 이들의 극히 일부는 한나라당에 새로운 피로 참여할 것이고 대부분은 보수적인 시민운동과 사상단체로 존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뉴라이트의 과거사인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서포럼’(2005년 1월 결성)이다. 이것은 한국판 ‘새역모’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역모’가 신자유주의를 내걸었다면 교과서포럼은 신(뉴)라이트를 내걸고 있을 뿐이다.

## 6. 뉴라이트의 과거사 새로 쓰기 = 교과서포럼

일본의 ‘새역모’와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은 등장배경, 인적구성, 활동방식, 보수진영의 지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집권해온 보수세력들이 패권과 재무장을 위해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보수세력들이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고 지배력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인적구성에서 비역사가가 중심인 것도 동일하다. 양자는 기존의 역사상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는 등 유사한 수사법을 사용하며 주로 중고교 교과서를 비판하고,<sup>3)</sup> 새로운 교과서 집필, 근현대 역사 새로 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활동한다. ‘새역모’가 일본의 극우

3) 교과서포럼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2005.

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이들의 지원을 받듯이 교과서포럼도 뉴라이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 핵심 일부는 보수 언론과 보수단체의 물질·정신적 지원을 받고 있다.<sup>4)</sup> '새역모'가 그러했듯이 교과서포럼도 조만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과 채택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공공연하게 보수단체의 물질·정신적 후원을 받으며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자들 간에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들이 그려내고자 하는 역사상의 골간은 분명해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교과서포럼의 창립선언문은 분명하게 그 기초를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닌 장애국가인가?'(중략)

물론 굴곡과 좌절 및 아픔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가늠해보아도 대한민국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가난을 극복하여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 리얼리티이다.(중략)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근거 없는 원죄의식이 불식될 때까지 교과서포럼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sup>5)</sup>

이러한 기초는 뉴라이트의 대부분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역모'는 미국과 공산주의자들이 자학적인 역사상을 강요한 결과 대동아전쟁에서의 조상의 죽음이 '개죽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친북좌파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여 자학적으로 '아버지 죽이기'를 한다는 것이다. 조상 혹은 아버지란 일본에서는 전범이고 한국에서는 친일파와 독재자이다.

교과서포럼은 지배계급과 지배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 다만 '새역모'가 자국과 자민족 중심의 역사인식을 추구했다면 교과서포럼은 비애국적 비민족적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포럼 관계자들의 시야에는 아버지만 보였지, 그들의 과거가 친일파 친미라는 것은 과소평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되고 만다. 이것이 한국의 뉴라이트가 미국과 일본의 보수나 우익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흔히 보수나 우익은 국가와 민족을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해 식민과 종속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경우 정반대이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자주는 물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도 비민족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교과서포럼의 핵심 인물인 김일영은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건국과 부국 — 한국현대사강의」(생각의나무, 2004)를 발간했다. 교과서포럼의 구성 인물 중 이영훈과 김일영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성과를 제출하고 있다. 이영훈은 식민지시기사와 경제사, 김일영은 현대사와 정치사 부분의 뉴라이트적 과거사인식을 주도할 것이다.

5) 교과서포럼 창립선언문. 교과서포럼 편, 앞의 책, 219~221쪽.

친일과 독재를 적극 해석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의 무모함은 자본주의와 대한민국의 승리, '역사의 종언'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다. '식민지근대화론', '독재개발'<sup>6)</sup> 등이 그 대표적인 논리들이다. 경제성장을 중심한 근대화와 개발을 위해서는 식민과 독재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곧 나라세우기(건국)와 부자나라만들기(부국)의 상징인 이승만과 박정희 등 역사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로 귀결된다. 식민=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친일파 이완용에 대한 적극 평가로 나아가는 것도 논리적 필연이다. 독립운동가나 민주화운동가가 경제성장=역사발전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용감하게 묻기도 한다. 그런데 이영훈은 정신대를 자발적인 매춘으로, 한승조는 일제식민지배를 축복이라고 용감하게 주장했다가 얼버무리며 사과하는 비겁함을 보였다.

경제성장, 근대화, 산업화라는 가치가 절대화되면 민족의 자주와 통일, 민주화, 평등, 평화, 환경, 인권 등 여타의 가치들은 희생되거나 왜소화되고 만다. 이들의 시야에는 경제성장, 지배자, 남한, 자본주의만 있지 민족과 민중은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경계선은 민족(자주 통일)과 민중(평등)에 대한 입장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탈근대와 탈민족을 고창하는 이들의 논리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보수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한국의 탈민족주의자들은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2000년 1월 결성)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일국사적 민족주의 역사학을 비판하며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추구를 내세웠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성과물에 이질적인 이영훈의 글도 실려 있다.<sup>7)</sup> 이영훈은 교과서포럼의 핵심 인물이다. 일본에서 '새역모'가 출범할 당시에 극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스트모던 논리들을 차용했는데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국에서도 살필 수 있다. 탈근대와 탈민족주의자의 '대중독재론', '우리안의 파시즘론'이나 '보통독일인 유대인학살책임론', '1억일본인 총참회론', '친일 오십보백보론' 등은 과거 청산이 결여된 한국적 상황에서 보수적 논리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동체 단위로서의 민족, 과거청산을 통한 개혁·진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뉴라이트와 탈근대·탈민족은 같은 전선에서 있고 보수의 편이다.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현대사를 보는 시각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발전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화에 중심을 두고 있고, 한미동맹에 대해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실용주의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감안하면 맹목적인 한미동맹론과 구별되지 않으며,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의 약한 고리인 북한인권을 앞세움

6) '독재개발'은 필자의 조어이다. '개발독재'란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독재에 중심이 있다면 '독재개발'은 개발에 중심이 있다.

7) 임지현 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2004.

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와 공세라는 측면에서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시장경제에 대해 '큰 시장 작은 정부'를 통한 성장과 빈곤해소를 주장하는 것도 올드라이트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기울어진 것을 감안하면 차별적이지 않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것만 보면 노무현 정권의 언술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구태어 그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무현 정권이 합리적 보수인 뉴라이트에 해당한다. 뉴라이트가 노무현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결국 뉴라이트는 신냉전질서에 조응하는 한국적 네오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집권과 그 정권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보수들에게 최소한의 합리성을 강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류는 여전히 그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리적 보수를 천명하고 등장한 뉴라이트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 7. 아직도 진보에 목마르다

한국의 보수는 지난 탄핵사태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력과 기득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피해의식, 민주화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콤플렉스에 압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뉴라이트 역시 그러하다. 이들의 상당수는 전향자나 운동권 콤플렉스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현실의 벽에 철저히 좌절했으며 소박한 꿈 꾸기도 포기했다. 한 역사학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 "지배권력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마치 현재가 '우리의 영원'인 양 채색한다. (중략) '역사의 종언' 테제와 '역사 이후' 테제는, 미래가 실제로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공히 부정한다."<sup>8)</sup>

뉴라이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반외세와 반독재민주화의 사투 과정에서 이완용 박정희 전두환의 적극적인 점을 조금도 인정할 여유가 없었지만 그들이 주역들이었고 공(功)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삼성의 공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의 공이 크다고 하더라도 불법과 과오를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그 기득권세력이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가 진정 과거사가 되는 국민에서는 뉴라이트의 주장에서 경청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식민이나 반공과 같은 특정가치가 생과 사를 가르치는 극단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스트로부터도 경청할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어느덧 민족과 민중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촌스럽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민중

8) 하비케이, 오인영 역, 『과거의 힘』, 2004, 210쪽

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지경이다.)<sup>9)</sup> 반일열기를 보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마저 민족주의의 과도함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을 본다. 현실보다 식자들의 인식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청산하고 이를 짓이 많다. 아직도 진보에 목마르다.

역사를 공부하는 자로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지막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직감한다. 햇빛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세력이 필사적으로 터널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통합이나 대연정 따위의 시도는 허황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는 구시대의 마지막 긴 터널을 헤쳐가기도 벅차다. 원칙에 충실한 과거사 정리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 8. 한국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10~	1945~	1961~	1987~	미래
지구적	구식민기	냉전기=신식민기		탈냉전기(신냉전) 유일패권기	
한반도(남한)	식민시대	분단시대			통일시대
		건국	산업화	민주화	국민통합
지배이념	식민주의=친일	반공주의=친미 반복		신자유주의=세계화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탈근대적 인식이 유행하거나 평화 인권 생태 여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근대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근대화의 실제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떠한 방도로 근대를 이를 것인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근대화의 주요한 가치 중 어느 가치를 중심으로 근대화를 파악하고 이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근대화의 주요한 가치들을 단순화하면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대화를 민족국가의 형성(민족주의), 민주화(민주주의), 산업화(성장주의), 평등화(평등-민중-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평등의 가치를 방기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주의혁명의 역사 역시 근대화 실험의 한 형태(사회주의적 근대화)였다는 점에서 평등화도 포함시켰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근대화'라는 개념은 산업화나 성장을 중심한 협의의 근대화론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념 외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보편적 이념

9) 뉴라이트에 대해 가장 본격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은 <민중의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라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배타적이고 절대적 이념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지배적이고 주류적 이념은 '(종속적) 자본주의적 근대화론'이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주의=식민지근대화론, 해방후 냉전기에는 친미·반북의 반공주의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물론 반공주의는 시기별로 중심 이념과 구성은 변화되어 왔다. 자본주의적 근대화론의 핵심이 성장주의인데, 박정희집권기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더해졌다. 적대적 공존의 냉전시대는 공산권의 붕괴로 종언을 고했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는 강고하게 잔존하다가 최근 신냉전체제로 편입이 강제되고 있는 국면이다.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미국의 유일패권이 성립되고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가 반공주의를 대체했다.

신자유주의를 통한 지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산권을 대신하여 불량국가·테리국가가 악의축으로 설정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은 물론 MD체제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황화론(黃禍論)과 북핵을 빌미로 신냉전질서가 추구되고 있다. 위기 출구를 찾아 헤매는 일본이 미국의 신냉전질서 구축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신냉전적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구냉전세력이 득세할 위협성이 커지고 있다. 뉴라이트와 일본 극우가 비록 미약하지만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냉전체제로의 편입과 냉전세력의 득세를 막아내기 위해 일본이란 약한 고리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식민과 냉전시기에 대한 과거사 정리작업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